

의안번호	제597호
의결 연월일	2013년 12월 19일 (제325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건의문

제안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3년 12월 19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

의안 번호	597
----------	-----

제안연월일 : 2013년 12월 19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이유

-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오후 과학벨트위원회를 열어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미래부는 위원회에 변경안을 올렸으나 변경안에 있던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기본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명시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예산증액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붙임 : 건의문

보낼곳 : 청와대, 국회의장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실, 국토교통부 장관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강창희 국회의장님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
 통신위원장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

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16일 오후 과학벨트위원회를 열어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 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간 관련 지자체·전문가 등과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쳐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능지구육성 종합대책'을 지난 11월초 확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데, 12월

16일 열린 과학벨트위원회에서는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을 염원하던 기능지구 주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감에 빠졌고 충청권 자치단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과학벨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토교통부의 거부로 국가산단 조성근거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일 과학벨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부가 잠정 확정했던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기능지구 활성화·과학벨트 정책수립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인 기본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란 조항을 넣었는데 이런 문구조차 삭제된 것은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은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지 않고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시할 수 없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 유형을 결정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런 경우 기능지구에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산단 대신에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능지구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골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과학벨트 기본방향에 '거점지구·기능지구 동시개발'이란 문구를 명시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란 애매한 표현을 '국가산단 조성'으로 변경할 것을 미래부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 듯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 청원군·충남 천안시·세종시 등 기능지구로 지정된 충청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산업 단지 조성 근거를 기본계획에 명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거점지구와 동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학벨트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기능지구가 응용화·사업화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3년 12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